

일본, 인도, 호주의 대(對)중국 전략*

박 용 수**

•요 약•

중국이 잠재적 패권국으로 빠르게 부상하면서 그간 미국이 지배해 온 기존 국제질서가 뒤 흔들리고 있다. 현실주의 세력균형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게 되면 주변국들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反)중국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일본, 인도, 호주 모두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세계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대중국 안보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국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한 국가가 막강한 국력을 통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안보동맹을 형성함으로써 그 잠재적 위협(국)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세력균형이론의 적실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세력균형, 균형, 중국, 일본, 인도, 호주

I. 이슈, 문제제기, 연구목적

미중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와 관련이 깊다. 현재 중국은 명목상 GDP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기준 GDP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상으로 중국은 1995년에 미국의 1/4 수준이었으나, 2016년 미국과 비슷해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미중 간 격차는 더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진흥사업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 중국 경제의 부상은 고스란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는데, 현재 중국은 군사비 지출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군사력에서도 미국 다음의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¹⁾ 중국은 현재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 등 2척의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항모 푸젠(福建)함을 2022년에 진수시켰으며, 다수의 핵잠수함과 우주 전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지상에 1,250기 이상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역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²⁾ 더욱이 중국은 300여 여개의 ICBM과 410개의 핵탄두도 보유하고 있다.³⁾

〈표 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 비중 비교(%)

	1995년	2005년	2016년	2022년	2028년
중국	5.76	9.56	16.09	18.48	19.72
미국	19.77	19.05	16.09	15.57	14.4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23.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약적인 증가로 잠재적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미중관계와 아태지역의 전략적 질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2012년 11월 새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2개의 백년 목표(两个一百年)”와 “중국몽(中國夢)”을 중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하는가 하면, 2035년에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엔 미군과 같은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들겠다는 “강군몽(強軍夢)” 목표도 제시했다. 2개의 백년 목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중국 중심의

1)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2”, 2023a. Lowy Institute, “Military Capability”, 2023.

2) 박동선, “오커스(AUKUS) 동맹 출범과 한국의 진로”, 『한국의교협회 외교광장』 XXI-24, 2021.11.19.

3) Harris, Bryant, “China Surpasses US in Number of ICBM Launchers”, *Defense News*, 2023.02.07. SIPRI, “SIPRI Yearbook 2023”, 2023b.

4)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強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집 (통권109호), 한국국방연구원, 2015, p.10.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방식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2017년 10월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사상으로 천명하고,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포괄적인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⁵⁾ 2022년 10월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기조에 대응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재강조하면서 서구식 현대화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갈 것을 천명했다.

일찍이 2012년 2월 당시 부주석 직위로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을 공식적으로 제의함으로써 태평양을 미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중국의 욕망을 처음 내비친 바 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대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후 중국은 미군의 서태평양 진입을 막기 위한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대만해협 위기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수단을 강화해왔다. 이미 2010년 초 이후 제1 도련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내에 군함을 수시로 진입시킴으로써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고조시킨 바 있는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을 건설하고 그 인공 섬에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더욱이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던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를 일방적으로 자국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이후 베트남,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에서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그간 여러 나라에 가한 경제보복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전랑(戰狼)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타국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서슴없이 단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략외교를 통해 미국에게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비판과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의 핵심

5) Glaser, Bonnie S. and Matthew P. Funairole, “The 19th Party Congress: A More Assertive Chinese Foreign Policy”, *Lowy Interpreter*, 2017.10.26.

이익에 대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014년과 2019년에 일어난 홍콩 민주화 운동도 무력으로 복속시키고, 이제는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 의지도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변국들이 최근까지 중국에 대해 채택해오고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역사적 관점에서 추적·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일본, 인도,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중견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미중 간 세력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오는 제2장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일본, 인도, 호주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분석이 각각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 제시된다.

II. 국가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세력균형이론은 그간 국제정치 연구에서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세력균형이론에서 세력균형은 국가 간의 힘의 분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세력균형이론은 어느 한 국가가 너무 강력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동맹 또는 연합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상쇄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세력균형이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모겐소(Hans Morgenthau), 월츠(Kenneth Waltz), 슈웰러(Randall Schweller), 월트(Stephen Walt),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등의 학자들의 학문적 기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화·발전해왔다. 세력균형이론은 특히 동맹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들 중 하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이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다 상위에 위치한 중앙권력조직이 부재한 세계에서 국가들은 잠재적인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능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월츠는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1979년 저서 「국제정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세력균형 정치는 두 가지 조건

(즉 체제의 질서가 무정부 상태이고 그 체제가 생존하고자 하는 개체들로 채워져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한다”고 주장했다.⁶⁾ 즉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초국적 중앙권력조직이 부재한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세력균형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국제정치학들은 국가가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을 크게 “균형(Balancing)”, “편승(Bandwagoning)”, 그리고 “헤징(Hedging)”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왔다. 균형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의 세력에 대항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지배적인 세력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관계학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수용된 균형전략은 국가의 자원과 능력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것이다.⁷⁾ 균형은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과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등 두 가지 세부적인 전략으로 분류된다. 내적 균형은 잠재적인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자체의 자원과 능력에만 의존하여 세력을 강화하는 방식인 반면, 외적 균형은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힘과 자원을 활용하여 잠재적 적국의 세력과 위협을 상쇄하고 자체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승은 일반적으로 강대국 또는 위협적인 국가와 협력하여 안보상의 혜택을 얻거나 승리의 전리품을 공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⁸⁾ 이 방식은 국가가 균형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잠재적인 패권국이 위협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종종 선택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국가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세력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더 강한 국가와 협력하여 안전보장 또는 다양한 혜택을 얻기를 바라는 약소국들이 선호한다.

나중에 월트는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을 수정하여 위협에 대한 인식이 동맹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위협균형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제안했다.⁹⁾ 위협균형이론에 따르면, 동맹을 맺는 국가의 행동은 주로 다른 국가에 대해 인지된

6)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1979, p.121.

7) Lieber, Keir and Gerard Alexander,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2005, p.119.

8) Waltz, 1979, *op. cit.*, pp.21-29, p.126.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pp.72-107.

9) Walt, Stephen M.,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4, 1985, p.4.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17.

위협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월트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위협에 대해 균형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약소국들은 증대하는 위협에 오히려 편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헤징은 균형과 편승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한 제3의 전략적 개념이다. 원래 헤징은 금융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국제정치학에서도 복잡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협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안보전략을 의미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 헤징 개념을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경쟁에 직면한 중간에 끼인 국가들의 전략에 적용하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초강대국만 선택하고 지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미리 피하기 위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Ⅲ. 일본의 대중국 전략

중국과 일본은 청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때 싸운 경력이 있었지만, 1972년의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중국의 근대화에 적극 협력했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는 확대되기 시작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국 간 정치·사회·문화 교류도 확대되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양국 간 상호의존도는 심화되었다. 2006년까지는 미국이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 중국이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고, 2020년 일본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22%와 25.8%에 달했다.¹⁰⁾ 양국은 2000년대 초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의 유엔(UN) 개혁 주도권 등의 문제로 대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까지 대체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센카쿠/다오위다오(Senkaku/Diaoyudao)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2010년 9월 7일 새벽,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이를 단속하던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일본 경찰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구금하면서 양국 간 문제가 단순한 외교문제를 넘어 긴박한 군사·안보적 현안으로 발전했다. 중국 정

10) 조비연,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p.97.

부는 역류된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중국은 모든 장관급 공식 회의를 취소하고 일본에 대한 관광 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희토류 광물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보복했다.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인한 여파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는 굴욕을 겪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이후 중일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고, 특히 2010년 GDP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중국의 공격적인 전략과 영토주권에 대한 열망과 결합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었다. 2012년 노다 정부가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3개 섬을 국유화하자, 1972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고, 중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공격까지 발생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산업은 일본 자동차 산업인데, 도요다, 혼다, 닛산 자동차 등의 중국 내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 났고 중국 내 현지 생산 계획도 전면 취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적대감은 중국의 호전적인 군사전략을 동반했다. 중국 해경 소속 선박의 센카쿠 열도 주변 인접해역과 영해에 대한 무단침입은 물론, 중국군 항공기의 센카쿠 열도 영공 침입도 급증했다. 2013년에는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표적 레이더를 조준하여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¹¹⁾ 2013년 4월,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핵심이익” 지역으로 선언하고 동년 11월에는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동중국해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의 통제에 불응할 경우 무단침입으로 간주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¹²⁾ 202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동중국해 지역 주변 해공역에서의 영유권과 주권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 집행 태세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은 외교·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갈수록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발전하고 있어 양측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동아시아에서 지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후 이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때까지 중일

11) 김지영·박성빈, “아베 시진핑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 중일 간 정치 갈등은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연구』, 제9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pp.140.

12) Osawa, Jun, “China’s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 ‘Great Wall in the Sky’?”, *Brookings*, 2013.12.17.

관계는 선진국인 일본과 개도국인 중국 간의 관계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급기야 2010년 중국이 GDP 면에서 일본을 추월한 이후 중일 간 경제 규모의 차이는 현재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비교에서, 1990년 일본의 GDP는 중국 GDP의 2배였으나, 현재는 중국의 GDP가 일본 GDP의 약 5배의 규모가 되었다.¹³⁾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급증한 중일 간 경제관계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갈수록 심화하는 중일 간 경제적 지위의 역전현상은 양측 간의 영유권, 외교, 안보 분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일 간 GDP 역전 이후, 중국은 일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감소함에 따라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더욱 드러내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이후 중국이 보여준 대일 경제보복과 외교적 강경책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국의 국방비도 일본을 크게 추월하였고, 특히 중국의 해군력 강화 노력의 결과 동중국해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해군을 양적인 면에서 압도하는 한편, 일본 해군전력과의 질적 격차도 빠른 속도로 줄어나가고 있다.¹⁴⁾

중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특히 중국 해군의 공격능력 향상 등은 일본에게 중국이 언제든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심각한 대중 위협인식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2013년 조사에서 일본인의 93%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수치는 2014년에는 91%, 가장 최근 2022년 봄 조사에서는 87%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02년의 42%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세이다.¹⁶⁾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심각한 위협인식은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대중국 견제 및 균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2012년 2월 일본 방위연구소(NIDS: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가 발간한 “2011년 NIDS 중국

13) IMF, 2023, *op. cit.*

14) 권재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인도 군사·전략적 관계 강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1집,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p.159.

15) Silver, Laura, Christine Huang and Laura Clancy, “Negative Views of China Tied to Critical Views of Its Policies on Human Rights”, *Pew Research Center*, 2022, p.4.

16) *Ibid.*

안보 보고서”는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확장이 아태지역의 해양안보는 물론 일본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 보고서는 또한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대한 중국 해경 선박의 잦은 불법 침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점증하는 공격적 전략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2015년 방위백서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¹⁷⁾ 일본의 2018년 방위백서도 핵능력, 미사일, 해군력, 공군력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와 상충하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¹⁸⁾ 202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중국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한마디로, 일본은 현재의 중국을 1930년대의 일본 제국주의 정권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매우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위력 재편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오고 있다.

일찍이 아베 수상은 미중 간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인도-태평양 해역이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미국보다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일본의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지역 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인도 방문 중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개념을 발표하고, 2012년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양 공간에 위치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을 발표했다.²⁰⁾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현 기시다 정권도 현실주의적 외교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군사력 강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 9조를 개정

17) Austin, Greg, “Hyping Threats? Japan’s Black and White Defense Paper”, *The Diplomat*, 2015.08.25.

18) 윤석정,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 평가 및 함의”, 『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17, 2021, p.7.

19) *Ibid.*, p.6.

20)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2집(통권109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p.80.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2015년 9월, 아베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취해진 일본군이 해외에서 싸우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을 없애는 “평화안전법제”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는데, 이는 군사력 사용을 자위 목적으로만 제한했던 이전 헌법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개혁에 따라 일본군은 동맹국을 원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격을 받고 있는 외국 군함을 방어하는 데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를 넘어 다른 국가로 향하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2월 18일 공식 채택된 “2018년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년”은 일본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적 균형전략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단거리 이착륙기와 수직 착륙기를 포함하는 전투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획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방공 능력 향상을 우선시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약 2,453억 달러를 할당했다.²¹⁾ 이러한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일본 육상자위대는 대만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9월 일본 전역에서 전투기 120대, 군용 차량 2만여 대,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²²⁾ 2022년 12월, 기시다 정부는 “반격능력의 보유”와 “5년간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핵심 안보전략 문서에 대한 개정을 단행했다. 이 문서들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을 일본 국가안보에 대한 “전례 없이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상에서 불법적인 영해 침범이나 영공 침범을 포함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³⁾ 이러한 안보전략 문서의 개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그것을 보완하는 대처를 위해 예산 수준이 현재 GDP의 2%에 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상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막기 위해 유효한 반격을 선제적으로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노선을 전수방위에서 보다 능동적인 군사전략으로 바꾸는 반격능력의 도입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일본은 미일동맹과 쿼드(Quad)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 견제전략을

21) 조비연, 2021, *op. cit.*, p.99.

22) *Ibid.*, p.100.

23) 이성훈·조은정,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12호, 2023, p.1.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물론 NATO, ASEAN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이 집단안보를 통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는 미국-인도-호주와의 양자 및 3자 그리고 4자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예컨대, 2014년 7월 일본 정부는 일본-호주 간 “21세기를 향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인도 간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도쿄선언”을 발표했다.²⁴⁾ 2015년에는 일본-인도 간 “군사무기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the Transfer of the Defence Equipment and Technology)”과 “군사기밀 첩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Securit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군사무기 공동개발 협력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일본-인도 비전 2025”를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을 가속화했다.²⁵⁾ 2011년부터는 일본-인도-미국 3국의 차관급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 9월에는 3국의 첫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되었다.²⁶⁾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졌는데, 예컨대 2015년 일본 자위대는 1992년부터 미 해군과 인도 해군 간 연합훈련으로 시작된 말라바르(Malabar) 해군 연합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이후 필리핀 인근 해역 및 태평양 광 인근과 일본해상 등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모두 참가한 말라바르 연합훈련이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월 개최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 미일 양국은 현재 중국의 행보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곧이어 개최된 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내건 일본 방위능력 강화와 방위예산 확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 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비한 양국 간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미일동맹과 쿼드 회원국들과의 안보협력을 뛰어넘어 NATO 회원국들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해오고 있다.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는 영국을 방문하여 일영 간 상호 파병을 허용하는 “원활 화협정(RAA)”을 체결했고, 파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

24) 조은일, 2020, *op. cit.*, p.81.

25) 권재범, 2020, *op. cit.*, p.170.

26) 조비연, 2021, *op. cit.*, p.103.

간 합동군사훈련과 병력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이탈리아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세계 4대 반도체 생산국이 포함된 칩4 동맹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외적 균형전략을 반영한다.

IV. 인도의 대중국 전략

중국과 3,488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에게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인 대외전략은 인도의 국가안보와 생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는 이미 1962년 중국과 국경문제를 놓고 한바탕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후에도 중국과 잦은 국경충돌을 겪어왔다. 1950년대 초반까지 인도-중국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중국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악사이친(Aksai Chin) 지역에 티베트와 신장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인도는 영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체결된 심라협약(Simla Convention)에 따라 맥마혼 라인(McMahon Line)을 기준으로 국경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심라협약과 맥마혼 라인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양국의 국경분쟁은 결국 1962년 10월 20일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었다. 악사이친과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두 지역에 대한 중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31일 간의 전쟁은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1962년 전쟁 이후에도 양측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국경선을 주장하며 여전히 정확한 국경선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양측은 접경지역에 군사기지와 도로 및 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 접경지역에서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30만 병력과 인도의 12만 병력이 실질 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따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²⁷⁾ 이는 양측 군인들이 불분명한 실질 통제선을 따라 다양한 지점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고 결국 양측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기 쉽

27) 백우열·이기태·이재현·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아산리포트』, 2019.12, pp.70-71.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1959년 이후 양국은 실질 통제선을 따라 서쪽 악사이친에서 동쪽의 아루나찰프라데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잦은 유혈충돌을 벌여왔다. 예를 들어, 1967년에는 나투라(Nathu La)와 초라(Cho La)라는 두 개의 산길을 따라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150명 이상의 인도 군인과 340명의 중국 군인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했지만, 양측 간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5년 중국군이 아루나찰프라데시의 투룽라(Tulung La) 지역에서 인도군 4명을 살해함으로써 이미 긴장된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2017년 여름에는 도클람(Doklam) 지역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로 양측이 73일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2020년 6월에는 악사이친 지역에 있는 갈완강 계곡(Galwan Valley)에서 양측 군인들이 충돌하여 20명의 인도군인이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는 양측 군인들이 부탄 동쪽에 위치한 타왕(Tawang)에서 충돌하여 양측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한편,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추진된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에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해군을 주둔시키는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이를 위해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항,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 항,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항, 미얀마 시트웨(Sittwe) 항,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항 등을 연결하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도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를 군사기지로 에워싸는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해양 확장 전략은 인도의 해양 진출, 무역 및 영토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공격적인 인도양으로의 진출 전략은 인도-중국 국경지역에서의 잦은 유혈충돌 사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한 인도의 위협인식을 극도로 증폭시켰다. 이러한 심각한 인도의 대중국 위협인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에 본사를 둔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가 2023년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중국을 인도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인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주간지인 인디아 투데이(India Today)가 2020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도인의 84%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겨우 9%로 나타났다.²⁹⁾ 퓨 리서치 센터의 2019년 설문조사에서도 인도인의 73%

28) Kugelman, Michael, “China Has Become India’s Greatest Threat”, *Foreign Policy*, 2023.01.19.

29) India Today, “Mood of the Nation”, 2020.08.

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61%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³⁰⁾ 이러한 인도의 높은 대중국 위협인식은 궁극적으로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새로 출범한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인도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해 미국과의 보다 강력한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인도-미국 간 3대 군사협정(LEMOA 2016, CISMOA 2018, BECA 2020) 체결을 모두 완결 짓는 등 양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모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구축된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핵심 멤버로서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인도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면서 인도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³¹⁾ 2018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³²⁾

모디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미외교는 인도군과 미군 간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으로도 이어졌다. 2018년 9월 6일, 인도 정부와 미 정부는 인도에서 매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벵골 만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타이거 트라이엄프(Tiger Triumph)” 훈련을 실시했다.³³⁾ 2020년 여름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대규모 유혈충돌 직후 인도-중국 간 극심한 군사적 긴장의 와중에도 인도-미국 양국은 인도양에서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했다.³⁴⁾ 2021년 2월에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에 있는 마하잔(Mahajan) 야전사격장에서 제16차 미-인 합동군사훈련 “유드압야스(Yudh Abhyas)”가 2주간 진행되었다.³⁵⁾ 2004년부터 진행되어온 유드압야스 합동군사훈련이 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진행된 것은 미-인 동맹이 그 어느 때

30) Pew Research Center, “Attitudes toward China”, Global Attitudes & Trends, 2019.12.05.

31) 조원득, “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제3호, 2019, p.136.

32) *Ibid.*

33) Abi-Habib, Maria, “U.S. and India, Wary of China, Agree to Strengthen Military Ties”, *The New York Times*, 2018.09.06.

34) Lo, Kinling and Liu Zhen, “India and US Conduct Joint Military Exercises in Indian Ocean”,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07.21.

35) Desk, Digital, “Indo-US Joint Exercise 'Yudh Abhyas' Begins In Rajasthan's Mahajan Field Firing Ranges”, *Republicworld.com.*, 2021.02.08.

보다 강해졌음을 방증한다. 또한 2020년 11월 이후 인도는 말라바르 연합훈련을 미국, 일본, 호주 해군과 함께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인도는 프랑스 및 영국과도 정기적인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해군협력도 확대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23년 2월 군사력 증강과 국경을 따라 병력을 추가적으로 증원·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24 회계연도 국방비 지출에 이전 기간의 수치보다 13% 증가한 726억 달러의 방위비를 책정했다.³⁶⁾

V. 호주의 대중국 전략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태평양 동맹 체제를 통해 자국의 안보적 안정을 유지해온 호주는 197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중국과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유대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호주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화평발전 노선을 자국 경제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축산물 수출국인 호주에게는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큰 경제적 기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호주-중국 간의 역동적인 관계는 2003년 8월 존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만나 경제 및 무역 협약에 관해 논의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당시 중국은 이미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의 주요 구매자로서 호주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같은 해 10월, 후진타오 주석은 하워드 총리의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해 에너지, 교육, 품질검사 및 식품안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호중 무역경제프레임워크(Trade and Economic Framework between Austral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서명했다. 2005년 후진타오와 하워드는 호중 자유무역협정(ChAFTA)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ChAFTA 관련 협상을 위한 양국 지도부 간 상호 방문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2007년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잠재적인 정치·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쿼드에서 탈퇴했다. 이후 호주의 대중 무역은 급증

36) Kumar, Manoj., “India Raises Defence Budget to \$72.6 bln amid Tensions with China”, *Reuters*, 2023.02.01.

하여 2009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국이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여 호주 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³⁷⁾ 2014년, 중국과 호주는 시드니에 중국 통화 청산은행을 설립하고 호주 은행에 500억 위안(82억 달러)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한도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³⁸⁾ 2014년 말 시진핑 주석이 호주를 방문해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후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한 찬사와 박수를 받으면서 호중관계는 최절정에 이르렀다. 의회 연설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는 회담을 갖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ChAFTA 협상의 성공적인 종결을 선언했다.³⁹⁾ ChAFTA는 이듬해 12월 발효되었고, 이로써 호중 간 무역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2017년에 이르러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1,1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호주 총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했고, 같은 해 호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650억 달러에 달했다.⁴⁰⁾ 2020년에도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1,020억 달러가 넘었고, 호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2021년 말 920억 달러로 증가했다.⁴¹⁾ 호주의 대중국 교역은 그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2003년 57억 7900만 달러(4위)에서 2020년 1,020억 달러(1위)로 급증했고, 호주의 대중국 수입도 2003년 96억 8300만 달러(3위)에서 2020년 610억 5400만 달러(1위)로 급증했다.⁴²⁾ 2020년 초 호주 정부가 COVID-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청하면서 촉발된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수출입 모두에서 호주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남아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호주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보여주는데,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실시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 중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³⁾

37) Atkin, Tim and Ellis Connolly, “Australian Exports: Global Demand and the High Exchange Rate”, *Bulletin*, 2013.06, p.2.

38) Reuters, “China Gives Australia Investment Rights, Yuan Clearing Bank”, 2014.11.17.

39) China Daily, “Ties between China and Oceanian Countries Enter New Era”, 2014.12.19.

4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2018.08.

41) *Ibid.*

42) 이민규,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9권 제19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2, p.289.

43) 조비연, 2021, *op. cit.*, p.79.

이러한 호중 간 경제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은 정치, 국제협력, 인적교류, 관광, 교육, 연구, 문화, 과학, 기후변화, 심지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심화·발전시켜나갔다. 이와 관련한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도 더욱 잦아졌는데, 2007년 호주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호주 총리를 비롯한 많은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했다.⁴⁴⁾ 이에 대한 답례로, 중국도 2006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2007년 후진타오 주석, 2008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2009년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2010년 시진핑 부주석 등 많은 지도부 인사들이 호주를 방문했다.⁴⁵⁾ 특히 2009년 리커창 부총리의 호주 방문 시 중국과 호주는 1972년 양국 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양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⁴⁶⁾ 당시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총리는 2010년 4월 23일 호주 국립대학 70주년 모리슨 강연에서 행한 “세계 속의 호주와 중국(Australia and China in the World)”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호중관계를 상호신뢰와 약속 그리고 솔직한 대화에 기반을 둔 진정한 우정이라고 묘사하였다.⁴⁷⁾ 2012년에는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가 다가오는 아시아 세기에 호주가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담은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White Paper)”를 발표했다.⁴⁸⁾ 2014년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부가 호중 간의 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신콜롬보계획(New Colombo Plan)”을 발표한 이후 호주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급증한다. 양국의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상호 방문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했고, 문화사절단의 상호 방문 및 관광교류도 급증했다.⁴⁹⁾ 또한 양국은 양자 간 안보협의(Bilateral Defense Dialogue)를 양국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09년 중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천빙더(陳密德)가 양자 안보협의를 위해 호주를 방문했으며, 호주 총사령관과 육해군 수뇌부 역시 중국을 답방했다.⁵⁰⁾ 2013년 4월 길라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국방부 간 장관급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매년

44) European Parliament, “Overview of Australia–China Relations”, 2010.

45) *Ibid.*

46) 유재광, “호주의 대중국 대결외교: 복합적 위협인식과 과잉 위협회피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p.107.

47) *Ibid.*, pp.107–108.

48) Henry, Ken,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vol.3, no.2, 2016, p.132.

49) 유재광, 2021, *op. cit.*, p.108.

50) *Ibid.*

진행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한 이후, 양국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 해양활동, 평화유지 분야에서도 상호 실무자급 교류 및 실질적 협력을 추진했다.⁵¹⁾ 전체적으로 호중관계는 양국 지도층이 강력한 파트너십에서 비롯되는 상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 비록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호주는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케빈 러드(2007~2010)와 줄리아 길라드(2010~2013) 정부 동안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는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포용적 접근방식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악화가 호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비록 2010년대 초 미국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한 대중국 견제정책이 시작되었지만, 호주 정부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경계했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호 우호적이었던 호중관계는 호주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개발하여 군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안보적인 면에서 중국에 대한 호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중국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2016년 판결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호중관계는 빠르게 경색되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이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53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자의적 해상 경계선인 구단선(九丹線)이라는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남중국해 90% 이상의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게다가 2016년에 호주에 대한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첩보 활동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호주인들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호주 노동당의 한 상원의원이 중국인 기업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대가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주 언론과 정치권은 호주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고, 탐사보도매체들은 호주 정계와 대학에 널리 퍼져있는 중국의

51) 이민규, 2022, *op. cit.*, p.289.

침투 현황을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수 정당이 지배하는 호주 정부는 이 논란을 기회 삼아 야당을 전면 공격하고 호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확산시켰다. 멜버른 로스쿨 달러 및 민주주의 데이터베이스(Melbourne Law School Dollars and Democracy Database)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개인과 단체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 정당에 약 1,260만 호주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정치 기부금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⁵²⁾ 호주 언론과 정치권이 호주 국내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전의 협력적이고 호혜적인 호중관계는 빠르게 상호 불신과 긴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호주와 중국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거 발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호주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국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⁵³⁾ "중국 때리기"가 공식 정부 문서와 고위 정부 관리들의 토론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같은 해 11월 발표된 호주의 2017 외교정책 백서에서 호주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전략과 신장 및 홍콩에서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면서 중국을 현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규정했다.⁵⁴⁾ 그리고 같은 해 자국의 대외전략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2007년 케빈 러드 총리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관계개선을 시도할 목적으로 탈퇴했던 쿼드에의 재가입 결정을 내렸다. 2018년 6월에는 외국의 영향력의 성격, 범위 및 수준을 공개하여 호주 정부 및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영향 투명성 제도 법안(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한 호주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2018년 8월,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 우려를 들어 국내 5G 인프라 개발에 중국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참여를 금지했다. 2019년 7월에는 호주 북부 다윈(Darwin) 항 인근에 위치한 글라이드 포인트(Glyde Point)에 미국 정부가 2억 1,100만 달러를 투입해 새 미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나왔다.⁵⁵⁾ 다윈 항은 지난 2015년 중국 기업인 란드브리지

52) Gomes, Luke Henriques, "Nearly 80 Percent of Foreign Political Donations Come from China, Data Shows", *The New Daily*, 2017.12.10.

53) Westbrook, Tom, "Australia, Citing Concerns Over China, Cracks Down on Foreign Political Influence", *Reuters*, 2017.12.05.

54) 이민규, 2022, *op. cit.*, p.290.

55) Greene, Andrew, "America's \$300 Million Push to Expand Naval Facilities in Northern Australia", *ABC News*, 2019.07.29.

(Landbridge Group)가 3억 6천만 달러에 99년간 임대계약을 이미 체결한 곳으로, 당시 오바마 미 행정부는 호주가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다윈 항을 중국 기업에 장기 임대한 데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호주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호주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을 더 이상 기회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호주의 급격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클리브 해밀턴(Clive Hamilton)의 2018년 저서는 호주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잘 보여 준다.⁵⁶⁾ 2019년, 호주 정부가 중국 기술 공급망을 배제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호중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 초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호주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고, 호주 정부는 그해 4월 COVID-19의 기원을 밝히는 국제조사를 요구하는 발표를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고, 2020년 4월 이후 몇 달 동안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랍스터, 구리, 목재, 면화, 석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징벌적인 무역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종차별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호주 여행 경고를 발령했으며, 중국 학생들의 호주 유학도 사실상 금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고위급 관리들은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호주를 조롱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호주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호주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폭증했다. 예를 들어,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보는 호주인의 비율은 2015년 77%에서 2018년 82%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2020년 55%로 급감한 후 2021년에는 34%, 2022년에는 33%로 더 크게 감소했다. 반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호주인의 비율은 2015년 15%에서 2018년 12%로 감소했으나, 2021년과 2022년 63%로 급증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직후 나타난 호주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는 경제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호주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하여 호주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통신과 에너지 및 첨단기술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호주 내 중국인 투자 급증과 주요 호주 기업 인수에 대한 대응이었다. 2020년 6월, 호주 당국은 호주의 외국인 영향 투명성 제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 내 중국 언론사 3곳 소속 기자 4명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중국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호주 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언문을 UN에 제출했

56) Hamilton, Clive, *Silent Invasion: China's Influence in Australia*, Melbourne: Hardie Grant Books, 2018.

다.⁵⁷⁾ 비슷한 시기에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홍콩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2020년 10월, 호주 정부는 40여 개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UN에서 신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판했다.⁵⁸⁾ 같은 해 9월에는 중국인 학자 2명의 비자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그해 11월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호주에 대한 중국 정부의 14가지 불망사항을 열거한 문서를 현지 매체에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호주 정부의 COVID-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요구,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호주 정부의 편향된 입장, 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호주의 근거 없는 비난, 국가안보를 이유로 호주 내 5G 인프라 건설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시킨 호주의 결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대사관의 조치는 호주의 반중국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국익에 관한 한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2020년 12월, 호주 의회는 총리에게 연방 또는 주 정부 및 대학이 외국 단체와 체결한 모든 사업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호주 대외관계 법안 2020(Australian Foreign Relations [State and Territory Arrangements] Bill 2020)”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21년 4월 빅토리아 주 정부는 실제로 이 법을 이용하여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협정 2건을 국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⁵⁹⁾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는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동맹국, 특히 미국과 더욱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중요한 조치도 취했다. 2020년 7월, 호주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빠르게 변화해온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이 호주의 안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2029-30년까지 10년 동안 호주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총 5,750억의 호주달러 투입을 약속하는 “국방전략 업데이트(Defence Strategic Update)”와 “국방구조계획(Force Structure Plan)”을 발표했다.⁶⁰⁾ 2021년 4월 호주 재향군인의 날에는 피터 더튼(Peter Craig Dutton) 국방장관과 마이크 페줄로(Mike Pezzullo) 호주 내무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유 민주주

57) Visontay, Elias, “Australia Declares ‘There Is No Legal Basis’ to Beijing’s Claims in South China Sea”, *The Guardian*, 2020.07.25.

58) Hurst, Daniel, “Australia Joins Global Condemnation of China over Xinjiang Amid Deteriorating Ties”, *The Guardian*, 2020.10.07.

59) Hurst, Daniel, “Federal Government Tears up Victoria’s Belt and Road Agreements with China”, *The Guardian*, 2021.04.22.

60) Panda, Ankit, “Australia’s 2020 Defense Strategic Update and Force Structure Plan: A Paradigm Shift”, *The Diplomat*, 2020.07.07.

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15일, 호주는 파이프 아이즈 정보동맹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삼각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미국, 영국과 함께 결성했다. 호주는 오커스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함은 물론, 미국과 영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더욱 가깝게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호주는 미국,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군 연합훈련에 2020년 11월부터 매년 참여해오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퀴드와 오커스 등 대중 봉쇄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 네트워크는 물론,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안보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호주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후 호주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스콧 모리슨 보수 정부 하에서 악화된 호중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양자 간의 교역 재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알바니즈 총리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 경색된 호중관계를 종식시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⁶¹⁾ 하지만 알바니즈 총리는 2022년 퀴드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또한 오커스 동맹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안보동맹 구축에 대한 호주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듯 알바니즈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회복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론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과 인공 섬의 군사화 및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 전술 사용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4월 24일 발표된 호주 “방위전략 리뷰(Defense Strategic Review)”에서 알바니즈 정부는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공격적 행동을 비난하기도 했다.⁶²⁾ 이 보고서에서 알바니즈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빠른 군사력 확장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이 지역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호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61) Knott, Matthew and David Crowe, “Xi Jinping Meets with Anthony Albanese, Ending Diplomatic Deep Freez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22.11.15.

62) Hurst, Daniel, “Beijing Says Don’t ‘Hype up the So-Called China Threat Narrative’ after Australian Criticism”, *The Guardian*, 2023.04.24.

VI. 결론

현실주의 세력균형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게 되면 주변국들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일본, 인도, 호주 모두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세계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국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과거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로 인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헤징전략을 취했으나, 2010년 이후 중일 간 급격한 세력균형의 변화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대중국 균형전략으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제고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국들과의 안보동맹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도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이 깊다. 사실 인도는 과거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갈수록 인도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비동맹주의 외교 전략에 기댈 수 있는 여지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인도양으로의 공격적인 진출 전략과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공격적 행동 등 최근 들어 인도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도는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호주 등의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인도는 이미 냉전기에 미국에 대항해 소련과 군사동맹을 맺은 전력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의 패권확장에 대해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호주는 그간 중국과의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헤징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전략과 호주 내 정치적 영향력 급증 등으로 인해 호주 내 대중국 위협인식이 폭등하면서 호주 정부는 자국의 군비증강 노력은 물론, 쿼드와 오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이는 결국 거대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와 상대적으로 허약한 호주의 방어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국방력 강화와 안보동맹 강화를 통해 상쇄하려는 호주의 균형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기한 역내 세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은 급속한 국력 신장으로 인한 중국의 패권국화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강력한 안보 및 경제·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이들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은 어느 한 국가가 막강한 국력을 통해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은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안보동맹을 형성함으로써 그 잠재적 위협(국)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세력균형이론의 적실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재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인도 군사-전략적 관계 강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1집,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 김지영·박성빈, “아베 시진핑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 중일 간 정치 갈등은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연구』, 제9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 박동선, “오커스(AUKUS) 동맹 출범과 한국의 진로”,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XXI-24, 2021.11.19.
- 백우열·이기태·이재현·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아산리포트』, 2019.12.
- 유재광, “호주의 대중국 대결외교: 복합적 위협인식과 과잉 위험회피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 윤석정,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 평가 및 함의”, 『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17, 2021.
- 이민규,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9권 제19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2.
-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強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집 (통권109호), 한국국방연구원, 2015.
- 이성훈·조은정,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12호, 2023.
- 조비연,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 조원득, “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제3호, 2019.
- 조은일, “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2집 (통권109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 Abi-Habib, Maria, “U.S. and India, Wary of China, Agree to Strengthen Military Ties”, *The New*

- York Times*, 2018.09.06.
- Atkin, Tim and Ellis Connolly, “Australian Exports: Global Demand and the High Exchange Rate”, *Bulletin*, 2013.06.
- Austin, Greg, “Hyping Threats? Japan’s Black and White Defense Paper”, *The Diplomat*, 2015.08.25.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2018.08.
- China Daily, “Ties between China and Oceanian Countries Enter New Era”, 2014.12.19.
- Desk, Digital, “Indo–US Joint Exercise ‘Yudh Abhyas’ Begins in Rajasthan’s Mahajan Field Firing Ranges”, *Republicworld.com.*, 2021.02.08.
- European Parliament, “Overview of Australia–China Relations”, 2010.
- Glaser, Bonnie S. and Matthew P. Funaiolo, “The 19th Party Congress: A More Assertive Chinese Foreign Policy”, *Lowy Interpreter*, 2017.10.26.
- Gomes, Luke Henriques, “Nearly 80 Percent of Foreign Political Donations Come from China, Data Shows”, *The New Daily*, 2017.12.10.
- Greene, Andrew, “America’s \$300 Million Push to Expand Naval Facilities in Northern Australia”, *ABC News*, 2019.07.29.
- Hamilton, Clive, *Silent Invasion: China’s Influence in Australia*, Melbourne: Hardie Grant Books, 2018.
- Harris, Bryant, “China Surpasses US in Number of ICBM Launchers”, *Defense News*, 2023.02.07.
- Henry, Ken,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vol.3, no.2, 2016.
- Hurst, Daniel, “Australia Joins Global Condemnation of China over Xinjiang Amid Deteriorating Ties”, *The Guardian*, 2020.10.07.
- Hurst, Daniel, “Federal Government Tears up Victoria’s Belt and Road Agreements with China”, *The Guardian*, 2021.04.22.
- Hurst, Daniel, “Beijing Says Don’t ‘Hype up the So–Called China Threat Narrative’ after Australian Criticism”, *The Guardian*, 2023.04.24.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23.
- India Today, “Mood of the Nation”, 2020.08.
- Knott, Matthew and David Crowe, “Xi Jinping Meets with Anthony Albanese, Ending Diplomatic Deep Freez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22.11.15.
- Kugelman, Michael, “China Has Become India’s Greatest Threat”, *Foreign Policy*, 2023.01.19.
- Kumar, Manoj, “India Raises Defence Budget to \$72.6 bln amid Tensions with China”, *Reuters*, 2023.02.01.
- Lieber, Keir and Gerard Alexander, “Waiting for Balancing: Why the World Is Not Pushing Back”,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2005.
- Lo, Kinling and Liu Zhen, “India and US Conduct Joint Military Exercises in Indian Ocean”,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07.21.
- Lowy Institute, “Military Capability”, 2023.

- Osawa, Jun, “China’s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 ‘Great Wall in the Sky’?”, *Brookings*, 2013.12.17.
- Panda, Ankit, “Australia’s 2020 Defense Strategic Update and Force Structure Plan: A Paradigm Shift”, *The Diplomat*, 2020.07.07.
- Pew Research Center, “Attitudes toward China”, *Global Attitudes & Trends*, 2019.12.05.
- Reuters, “China Gives Australia Investment Rights, Yuan Clearing Bank”, 2014.11.17.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 Silver, Laura, Christine Huang and Laura Clancy, “Negative Views of China Tied to Critical Views of Its Policies on Human Rights”, *Pew Research Center*, 2022.
-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2”, 2023a.
- SIPRI, “SIPRI Yearbook 2023”, 2023b.
- Visontay, Elias, “Australia Declares ‘There Is No Legal Basis’ to Beijing’s Claims in South China Sea”, *The Guardian*, 2020.07.25.
- Walt, Stephen M.,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4, 1985.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1979.
- Westbrook, Tom, “Australia, Citing Concerns Over China, Cracks Down on Foreign Political Influence”, *Reuters*, 2017.12.05.

【 Abstract 】

Strategies of Japan, India, and Australia toward China

Yong Soo, Park

According to the realist logic of balance of power theory, China's rise should prompt neighboring states to bolster their defense capabilities and forge alliances to counterbalance China's power expansion. Since the mid-2010s, Japan, India, and Australia have indeed been actively strengthening their militaries and forming security alliances, mainly with the United States, amid the escalating US-China rivalr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situation underscores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balance of power theory, which predicts that states will reinforce their military power and form security alliances when perceiving a rising power as a potential threat.

Key Words : balance of power, balancing, China, Japan, India, Australia

